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 병 규**·이 곤 수***

The increasing demand for welfare of the disabled requires elaborated policy design and adequate budget. This financial aspec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received unprecedented attention in recent years as authority and budget for welfare policy decentralized. However, the empirical analysis of welfare spending for the disabled remains understudied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issu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key variables in determining welfare budget for the disabled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plores what factors should affect welfare spending for the disabled with panel data comprising 30 local governm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We find self-finance capacity negatively affects welfare spending for the disabled in contrast to its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development. Female share in a local assembly influences welfare positively, and devolution tends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welfare spending for the disabled.

[Key Words: Welfare Spending for the Disabled, Devolution, Female Share in a Local Assembly,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I. 서론

장애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전형적인 사회복지과제이다. 특히 사회복지체계가 구축이 미진한 우리사회에서 최근 장애인구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많은 장애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복지서비스 대상인 등록장애인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02만4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2-B00034).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연구교수(k7333uk5@gmail.com).

***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연구센터 팀장(ksyi@eai.or.kr).

천명에서 2008년 12월 현재 2,24만7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변용찬 외, 2009). 또한 장애인복지 수요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노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구구성이 다양화되는 질적 변화는 장애인복지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라는 재정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책임이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최근 지방정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재정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1995년 본격적 지방자치의 실시이후에도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일선전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지역실정에 부합한 복지향상이라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기대는 별로 충족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화와 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지방이양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개별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영실, 2007).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복지인프라 상황에서 지방간재정격차와 재원확보의 문제 등은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가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박고운·박병현, 2007; 이익섭·김동기, 2007).

장애인복지문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가 강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장애인복지 수요충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재정적 수요가 정부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정책은 형식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재량권 확대와 책임이 강화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장애인정책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적·실천적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재정의 영향은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내 경쟁적인 하위영역간 격차문제-이를테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의 격차-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예산결정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재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이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의 분석에 치중되었을 뿐, 장애인복지재정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1)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정책분야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이 장애인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장애인복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지방분권화가 장애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한다. 둘째,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과 연구설계를 구성한다. 셋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구, 시, 군)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란 국가나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득·김미옥, 1995). 이를 위해 정부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상부동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각종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²⁾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정책서비스로 일관되어 왔다(나운환, 2005: 235-236). 1990년 지방자치의 재개 이후 많은 정책들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지만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중앙정부 소관으로서 지방정부는 이

지예산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강영실, 2007; 이익섭·김동기, 2007)들이 있지만, 이 연구들은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규범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2)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장애인정책의 기초는 과거 소득보조를 위주로 한 보호차원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소득 능력의 회복과 고용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를 단순히 집행하는 하향적 정책체계의 특성을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전문적 추진체계 미비와 복지재정 및 시설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권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책임 의식과 복지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충실화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참여를 고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전개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되고 책임감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의 정치, 사회, 경제적 특성들이 정책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게 된다(Cho et al, 2005; Fording et al, 2007; Kim and Fording, Forthcoming). 이는 중앙집권체제와는 달리 각 지역의 특성들이 지역정책에 반영되어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발족(2003. 4.),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발표(2003. 7.),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4. 1.) 및 ‘국고보조금정비방안’ 확정(2004. 7.) 등 일련의 분권화정책추진을 통해 22개 중앙부처의 53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³⁾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히 장애인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 등 반복적 집행사업의 성격을 가진 운영비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등 이용시설의 신축,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⁴⁾

3) 이 중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163개 사업(1.1조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실제 22개 부처 가운데 재경부, 산자부 등 7개 부처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없는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전체 지방이양 예산의 55.8%로 절반이상이 복지예산에 집중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은 64개 사업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분야 13건(비경상적수요 3개 포함), 장애인 복지분야 24건, 아동복지분야 4건, 가정복지분야 11건, 보건의료분야 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권교부세제도는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을 위한 이전통로이자 지방재정의 장류성 확대와 서과에 대한 자기책임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제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혜자(2006)를 참고하시오.

<표 1> 장애인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내용

구 분	사업별 종류
경상적 수요 중 장애인복지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정보화 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정신지체인 지원(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지원(수화통역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지원
비경상적 수요 중 일반수요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비경상적 수요 중 특정수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2006)에서 재정리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지역 특유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지역간 장애인복지수준의 격차를 심화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별히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이 높고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정체 내지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각 지방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간 장애인복지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만일 차이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

정부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이론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이론적 논거가 될 수 있다.⁵⁾ Key(1949, 1956), Fabricant(1952), Lockard(1963), 그리고 Dawson과 Robinson(1963) 등의 연구에서 시작된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논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냐 하는 상반된 이론적 입장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적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정당간의 경쟁, 다수당의 규모, 주요 정당의 정치적 가치와 이념 등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하면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기존의 득표대상의 기득권층을 넘어서 사회의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재분배 정책의 도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Carmines, 1974; Wildavsky, 1974; Wong, 1988). 반면에 Peterson(1981)은 지방정부는 국가정부와 관심사가 다르며 그들이 가진 자원과 납세자에게 중점을 둔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정책에 치중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는 사회복지지출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Fabricant(1952)는 주민 1인당 소득, 도시화 정도, 인구밀도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공공지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Dawson과 Robinson(1963)은 지방정부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1인당 소득, 인구밀도 및 도시화)임을 확인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Fry와 Winters(1970)는 주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에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반박하였다. 이후의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결정요인에 관한 일치된 결과에 이르지 못한 채 다양한 분석결과들이 제시되었다(지병문, 2002).

국내에서는 몇 가지 이론적 모형으로 분류한 서구의 정책결정 및 예산결정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들로 발전하였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결정모형, 정치·제도적 결정모형, 재정능력 결정모형, 점증주의 결정모형의 분류에 입각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예산결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지출의 결정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6) Dawson 과 Robinson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이를 경제적, 사회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 정치적 요인이 사라지는 결과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은 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Dye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정책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나타나는데 정치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Dye, 1979).

사회·경제적 결정모형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의 차이는 그 지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로 1960년대 이후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와 재정학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이 모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소득수준, 교육수준, 도시화·산업화 정도, 지역발전정도 등)과 인구학적 변수들(인구밀도, 취약계층의 비율 등)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설명한다.

정치·제도적 모형은 기본적으로 Key(1949)와 Lockard(1963)의 전통에 따라 정치참여와 경쟁과 같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사회복지지출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정치적 관점을 지지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정당간 경쟁, 정치참여, 집권정당, 선거제도 등 다양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설명은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0년 중반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김태일, 1998; 김수완, 1998; 손희준, 1999; 강윤호 2001). 특히 김병규 외(2009)는 정치적 변수(단체장경쟁률, 지방의원경쟁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등)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능력 결정모형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충당능력을 가장 중요한 재정지출결정요인으로 파악한다. 정부는 총 세입규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사회복지지출결정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진재문, 2006). 특히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을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 자체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치권은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최재녕, 200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지방교부세비율, 보조금비율, 1인당 지방세액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강윤호, 2003; 손희준, 1993; 진재문, 2006).

점증주의론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규모가 차기 예산의 규모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인지능력 한계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한정된 몇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idavsky, 1986). 장애인복지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전년도의 장애인복지 세출예산이 익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 최근 연구들에서도 점증적 요인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고운·박병운, 2007).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의 결정요인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o김수완 (1998)	26개시, 96개군 41개구 (1980-1995)	회귀분석	1인당사회복지지출수준 총예산대비복지사업예산 (%)	지방자치제 실시 사회경제적 변수 보조금	- - (+)
o김태일 (1998)	서울시자치구 (1993-1997)	회귀분석	1인당 사회복지 지출수준 총예산대비 복지사업예산(%)	1인당총예산 1인당자체재원 지방자치제 실시 과년도 복지예산비율 인구밀도 1인당자체재원액	(+) (+) (+) (+) - -
o손희준 (1999)	15개시·도 (1987-1997)	회귀분석	1인당사회복지 지출수준	1인당 GRP 인구밀도 1인당지방세액 1인당보조금액 1인당전년도지출액 지방의회구성 자치단체장 선출	- - - (+) (+) - (+)
o진재문 (2006)	16개 시·도	회귀분석	사회보장비비율	지방선거 단체장 소속 정당 한나라당 공식빈곤지수 경제고통지수 외환위기 1인당지역내 총생산 1인당지방세 전년도 사회복지비비율	(-) - (-) (+) - (-) (-) (+)
o최재녕 (2004)	31개 기초자치단체	군집분석 회귀분석	복지재정 지출비율	인구규모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선거참여율 당선자득표율 득표경쟁 국고보조금비율 전년도복지재정지출비율	- (+) - - - (-) - - - (+) (+)
o강윤호 (2001)	15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1989-1998)	회귀분석	사회보장비비율	지방정부규모 전년도 사회복지비비율 생활보호대상자비율 노령인구비율 지방세징수총액	(+) (+) (+) (-) +
o박고운, 박병현 (2007)	230개 기초자치단체 2003-2006년	회귀분석	사회복지 예산비율	군/구지역 노령인구비율 지역경제개발비율 선거해 전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	(+) (-) (+) (+) (+)
			1인당 사회복지비	군지역 지역경제개발비율 선거해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부담액 전년도 사회복지비	(+) (+) (+) (-) (+) (+)

주) 무의미한관계: -/ 유의미·긍정적관계 (+)/ 유의미·부정적관계: (-)

이와 같이 정부지출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많은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해서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이 갖는 방법론상의 결함, 분석시기 및 연구대상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분석모형, 분석수준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상이한 분석결과는 상당부분 종속변수의 선정 및 측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속변수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 또한 정확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 과제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설명변수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복잡한 현실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떤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지출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명확한 이론적 기반에 입각한 변수일 것, 둘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경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변수일 것, 셋째,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분석에 적용가능한 변수일 것, 넷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구시와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구, 시, 군)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변수일 것 등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을 둘러싼 재정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구조적 요인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비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범위로서는 대구광역시의 8개 기초자치단체와 경상북도 22개7)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애인복지예산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선정한 이유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장애인복지비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항목이 일관

7) 자료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울릉도는 제외되었다.

성이 없어 세부항목을 검토한 뒤, 장애인복지비 지출을 다시 계산하여 분석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료공개를 꺼려하여 자료수집을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전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예산구조상 공개된 자료의 수집의 한계와 지역마다 사회복지에 포함된 항목들이 일부 상이한 관계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시간적 범위를 2000년부터 2007년까지로 선정한 이유는⁸⁾ 장애인복지비 지출의 요인 중 정치적 영향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표로 선정된 정치적 변수들(예를 들어 선거실시여부와 선거경쟁률)을 포함하는 지방선거의 실시전후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2005년 지방분권화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적절한 시간적 범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통계패키지 STATA를 활용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합시계열 분석(Pooled Time Series)과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각 년도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의 횡단면적 자료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8년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시계열적 자료를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통합회귀분석과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장애인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의 데이터 구조상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시계열적 자료와 각 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로 구성된 횡단면적 자료가 통합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함으로 보다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통합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합회귀분석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를 추정함에 패널간의 오차항의 차이 및 시계열적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는 동시에 패널안에서의 자기상관관계가 없음을 가정함으로써 회귀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Beck과 Katz(1995)에 의해 제시된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는 회귀계수를 추정함에 있어 패널개체간의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있을 경우 사용되는 기법으로 표준오차를 추정함에 있어 분산의 패널안에서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동시에 패널개체간의 이분산성을

8)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고 대부분의 연구는 선거 당해 외에 영향요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2004년에 정부혁신으로 인한 지방이양이 일어나고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허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기법은 일반회귀분석에서의 오차나 결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변수, 가설 설정 및 모형 구성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장애인복지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중 사회보장비 안의 장애인복지비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는데 분석을 위해 장애인 복지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장애인 복지비를 사용하였다. 이는 장애인 복지비를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써, 지자체간의 보다 타당한 장애인복지 정책산물을 비교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와 구성이 대상 주민들에게 미칠 결과지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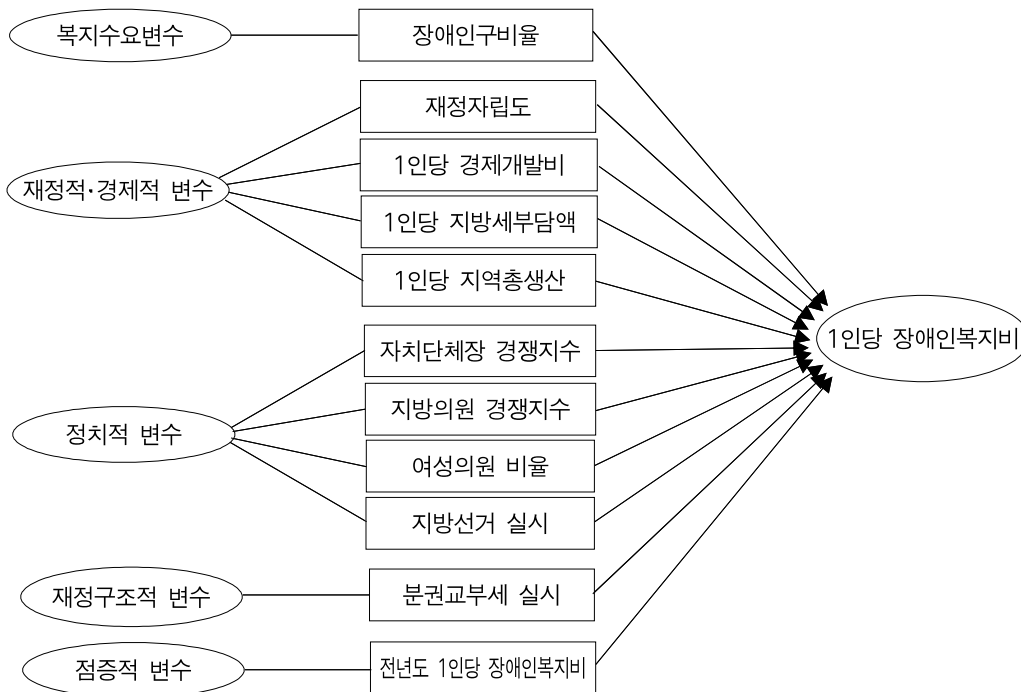
<표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변수		측정방법	출처	
종속 변수	1인당 장애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총인구수	각 지자체예산서	
독립 변수	복지수요변수	장애인인구비율	장애인수/총인구수	시·군·구 주요통계
	재정적·경제적 변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	대구·경북통계연보
		1인당 경제개발비	경제개발비/총인구수	대구·경북통계연보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세총액/총인구수	대구·경북통계연보
		1인당 지역총생산	지역총생산/총인구수	대구·경북통계연보
	정치적변수	자치단체장 경쟁지수	1위,2위 후보자간 경쟁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회경쟁지수	1위,2위 후보자간 경쟁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의원비율	여성의원수/전체의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실시	없는 해:0, 있는 해: 1	
	재정구조적 변수	분권교부세실시	실시 전: 0, 실시 후:1	
점증적 변수	전년도 1인당장애인복지비	전년도 장애인복지비/총인구수	각 지자체예산서	

장애인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을 토대로 한 설명변수들로는 이론부분에서 검토하였듯이 장애인 수요변수로 장애인 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변수로 재정자립도 (Self-Financing Capacity), 1인당 경제개발비, 지역사회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경제적 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Local Tax per Capita), 1인당 지역총생산(GRDP per Capita),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역량과 성향,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 변수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1위와 2위간

의 경쟁지수, 의회의 경쟁지수,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비율과 선거실시해를 고려하였고, 사업의 이양전후를 나타내는 재정구조적 변수로 지방이양전과 후를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비성향을 나타내는 점증적 변수를 고려하였다(표-3참조). 위에서 논의한 변수들을 고려한 모형을 도식화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1>과 <식-1>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 분석모형



$$Y_{i,t} = a + \beta_1 X_{1,i,t} + \beta_2 X_{2,i,t} + \beta_3 X_{3,i,t} + \beta_4 X_{4,i,t} + \beta_5 X_{5,i,t} + \beta_6 X_{6,i,t} + \beta_7 X_{7,i,t} + \beta_8 X_{8,i,t} + \beta_9 X_{9,i,(t-1)} + \beta_{10} D_{1,i,t} + \beta_{11} D_{2,i,t} + \varepsilon \dots\dots <식-1>$$

Y=1인당 장애인복지비지출

X1=장애인인구비율, X2=재정자립도, X3=1인당 지역개발비,

X4=1인당 지방세, X5=1인당 지역총생산, X6=기초자치단체장 경쟁지수,

X7=지방의회의원 경쟁지수, X8=여성의원비율, X9=전년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지출,

D1= 선거더미, D2= 지방이양더미

i=기초자치단체, t=년

각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장애인복지수요변수인 장애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1인당 장애인복지비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수요공급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지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일반회계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1인당 경제개발비는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주어진 규모의 재정에서 지역의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제개발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는 재분배정책인 복지정책에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는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적 능력이 큰 정부일수록 복지지출에 사용할 재정적 능력 또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총생산은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역경제가 안정적일수록 복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eterson이 주장하였듯이 지방정부는 경제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 여유가 있을 때 복지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수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쟁지수⁹⁾가 낮을수록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장애인복지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보자간 경쟁이 심각할수록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속적인 집권과 당선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당간의 경쟁과 복지지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경쟁지수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경쟁지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도 동일하다. 즉, 지방의회 의원의 경쟁지수가 낮을수록 (선거에 있어 경쟁이 치열할수록) 장애인복지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유는 여성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많은 의원들이 사회복지 관련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단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사회복지부문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9) 경쟁지수는 우선 1위와 2위 후보자의 경쟁률을 계산한 다음, 1위 후보자의 경쟁률에서 2위 후보자의 경쟁률을 감한 수치를 경쟁지수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산정된 경쟁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득표의 차이는 적고 경쟁은 크며 경쟁지수의 값이 클수록 득표의 차이가 크고 경쟁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1\text{위 득표자의 경쟁률} = 1\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 (1\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 2\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2\text{위 득표자의 경쟁률} = 2\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 (1\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 2\text{위 후보자의 득표율})$$

$$\text{기초자치단체장의 경쟁지수} = 1\text{위 득표자의 경쟁률} - 2\text{위 득표자의 경쟁률}$$

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는 사회복지지출의 하위영역인 장애인복지 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해에는 장애인복지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재당선을 위해 선거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비지출도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재정구조적 변수로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더미는 어느 방향으로나 갈수 있는 변수이지만 근래에 특히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장애인 복지비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복지사업의 바탕아래서 지방이양 이후 지방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증가했을 것이라 기대된다.¹⁰⁾

점증적 요인으로는 전년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를 고려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전년도 예산비율은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당해 연도의 장애인복지비는 전년도 지출수준의 일정한 비율로 결정된다는 점증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전년도 장애인복지비는 당해 연도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IV.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장애인복지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통합회귀분석과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적용해 얻은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통합회귀분석의 모형설명력은 수정된 R^2 값이 47.59,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적용한 분석결과의 모형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이 38.47로 모형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통합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재정자립도, 지방선거실시,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장애인복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장애인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에서는 통합회귀모형의 유의한 변수에 1인당 지방세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그렇지만 분권교부제로 전환된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재정부담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예산 회계상 지방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박혜자, 2006: 289).

<표 4> OLS &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구분	OLS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독립변수				
장애인인구비율	.777	.83	1.090	.707
재정자립도	-.296**	.13	-.368**	.152
1인당 경제개발비	-.007	.027	-.007	.034
1인당 지방세	.000006	.000006	.000008*	.000004
1인당 지역총생산	-.00001	.00003	-.00002	.00004
자치단체장 경쟁지수	-.036	.040	-.037	.028
의회경쟁지수	-.035	.082	-.048	.076
여성의원비율	.710**	.222	.814**	.266
지방선거실시	-3.860*	2.18	-4.29*	2.26
지방이양전후	1.255	2.90	.586	3.13
전년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	.613***	.064	.446**	.211
adj-R ² · R ²	0.4759		0.3847	
N	210 ¹¹⁾			

종속변수: 1인당 장애인복지비 지출 *** = p<0.001, **p<0.05, *p<0.1

분석방법부문에서 설명하였듯이 최종 결과의 해석은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는 PCSE 모형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다.

먼저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변수인 재정자립도는 기대와는 달리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장애인복지비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첫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구가 많은 곳이므로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과 관련된 지역경제개발비 등 다른 정책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 결과를 다른 재정적 변수인 지자체의 1인당 경제개발비와 함께 고려해서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판단된다. 1인당 경제개발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재정자립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는 복지보다는 경제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11) 울릉도를 제외한 총 30개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의 데이터가 고려되었으며 점증적 요인을 고려함으로 인해 2000년도의 장애인복지비가 2001년도 점증적 요인이라는 내재변수로 사용됨으로 인해 총 210개의 N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 있다.¹²⁾

정치적 변수들 중에는 여성의원비율과 선거실시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원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복지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거실시해는 기대와는 달리 선거해에 오히려 장애인복지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나 특히 선거실시해인 2002년은 장애인복지비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변동이 없었는데 이러한 특정시기의 급격한 변이에 의해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³⁾

점증주의 변수인 전년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는 당해연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당해연도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일정비율 증가한다는 점증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장애인인구비율은 가설과 같이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쟁지수나 의회의 경쟁지수의 회귀계수의 방향은 기대와 같이 부의 방향, 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장애인복지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정적 구조변수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전후는 2005년 이후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장애인복지지출을 결정하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며, 설명요인들로 장애인복지 수요적 요인과, 지방정부의 재정적·경제적 요인, 재정구조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적 요인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1인당 장애인복지비지출이 종속변수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의 수요를 나타내는 장애인인구의 비율이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변수인 재정자립도가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1인

12) 장애인 복지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비를 종속변수로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보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나 2005년부터 많은 부분의 국가 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데이터의 구조상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13) 선거실시해로 2006년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선거해에 장애인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당 경제개발비도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정치적 변수로서 의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장애인복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넷째, 지방이양후 장애인복지비가 이양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점증적 요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수요변수인 장애인인구비율이 정책결과라 할 수 있는 지출에 연계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복지대상으로 당연시(deserved)되는 장애인 복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이 시작되어 집행되어 왔고 충분히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변수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즉, 이미 정착된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수요의 영향력이 작게 미친다는 점,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수요가 정책결과에 연결될 만큼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⁴⁾ 그러나 정책의 역사나 장애인조직의 수와 규모로 볼 때 두 번째 접근보다는 첫 번째 정책이 정착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생각된다.

둘째, 재정적 요인변수로서 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비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첫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구가 많은 곳이므로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 둘째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장애인복지부분에 영향을 미칠 여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주재원을 지역의 가시적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개발비가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세 번째의 이유가 타당한 설명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고, 여기에 높아진 재정자립도가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지역의 복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의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라는 변수를 찾아내었다. 이는 지자체의 정치적 메카니즘 속에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역량과 의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각 지역의 복지수혜집단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 이익집단의 활동을 통해 복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즉 이익집단들이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옹호하는 단체는 약 21개 종류의 단체들이 있으며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울릉, 봉화, 성주, 군위를 제외하고는 5개에서 최다 11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의 지방이양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한·독 사회과학 논총』 17(2): 191-219.
- 강운호(2001).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지방정부연구』 5(1): 109-126.
- 강운호(2003).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12(1): 151-174.
- 김병규·이근수·조덕호(2009).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1): 106-123.
- 김용득·이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동풍.
- 김수환(1998). 『한국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0-1995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일(1998).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서울시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1): 317-338.
- 나운환(2005).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직업재활연구』 15(2): 235-264.
- 박고운·박병현(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423-451.
- 박병현(2008).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159-185.
- 박혜자(2006).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권교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3): 279-300.
- 변용찬 외(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희준(199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81-97.
- 유재원(1999).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Peterson의 도시한계론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8(3): 79-98.
- 이은재(2007). 여성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진출방안. 『지방행정연구』 21(4): 201-223.
- 이익섭·김동기(2007).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변화추이 및 장애인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49-70.
- 지병문(2002). 선거경쟁과 지방정부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 173-192.
- 진재문(200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5-30.
- 최재녕(200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정책과학학회보, 9(4): 451-474.

- Dawson, R.E. and J.A. Robinson(1963). Inter-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tics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cs*. 25.
- Dye, Thomas R.(1979). Politics VS Economics: the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n Policy Determination. *Policy Studies Journal*. 7: 652-662.
- Fording, Richard C., Sanford F. Schram, and Joe Soss(2007). Devolution, Discretion and the Impact of Local Political Values on TANF Sanctioning. *Social Service Review*. 81: 285-316.
- Fry, B. and R. Winters(1970).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 Keiser, Lael R., Peter R. Mueser, and Seung-WhanChoi(2004). Race, Bureaucratic Discre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Refor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 314-327.
- Key, V.O.(1949). *Southern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Key, V.O.(1956). *American State Politics*. New York: Knopf.
- Kim, Byungkyu and Richard C. Fording(Forthcomming). Second-Order Devol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ANF. *State Politics and Policy Quarterly*.
- Lockard, Duane(1963). *The Politic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New York: Mcmillan.
- Peterson, Paul(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davsky, Aron(1974).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Boston: Little, Brown.
- Wilensky, Harold(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lensky, Harold(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Wong, Kenneth(1988).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18.
-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서.
- 재정고(Local Finance Open System) <http://lofin.mopas.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논문접수일: 2009.12.21 / 심사개시일: 2010.1.12 / 심사완료일: 2010.2.8〉